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김성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1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2일

발 의 자: 김성준, 경기문, 김용일,
김원태, 김춘곤, 박승진,
박영한, 서상열, 서준오,
소영철, 아이수루, 이영실,
이종태, 임종국,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홍국표
의원(18명)

1. 주문

- 서울시 관내에는 도시철도와 일반철도가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고 과거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였지만 현재 지상 철도는 도시개발 관점에서는 보행 및 도로체계를 단절시켜 도시기능을 저해하고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단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 관내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공간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통합개발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통합개발 구역 지정 기준, 상부공간 개발이익금 활용 근거 등을 규정하는 「대도시권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서울시 철도는 도시 발전의 근간으로 교통·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지상 철도의 경우 보행 및 도로체계를 단절시켜 도시 공간적 제약을 유발하고 지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음, 진동 등 주변 지역 환경악화를 촉진 시키는 수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발생시키고 있음.

- 특히, 지상 철도 인접 지역주민들은 지상 철도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사고 위험, 소음·진동 등 환경문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감수해 왔음에도 지상 철도의 특성상 도시개발계획 추진에서 소외되어왔고 이에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상 철도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개발하여 지상 철도 인접 지역주민들은 물론 서울시 등 대도시권의 전체적인 균형개발을 더욱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대도시권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통합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만큼 통합개발구역 지정 및 자원 조달 기준 등을 마련하는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택지개발촉진법」

4. 이송처

- 가. 국 회 : 국회의장
- 나. 정 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서울시 철도는 도시 발전의 근간으로 교통·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지상 철도의 경우 보행 및 도로 체계 단절로 도시 공간적 제약을 유발하고 지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음, 진동 발생으로 주변 지역 환경악화를 촉진 시키는 등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지상 철도 인접 지역주민들은 지상 철도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소음·진동 등 환경문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감수해 왔음에도 지상 철도로 인해 도시개발 계획에서는 배제되어 왔고 이에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도시 통합개발을 추진하여 서울 내 지상 철도 인접 지역주민들은 물론 서울시 등 대도시권의 균형개발을 더욱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상 철도는 대부분 국철(경원선, 경의선, 경

인선, 경부선, 경춘선, 중앙선)로 도시철도 지상 구간까지 합하면 총 101.2km이며 차량기지 면적은 총 4.6km²에 이르러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경우 많은 도시공간이 확보되어 도시 통합개발을 위한 더 많은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상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상부 공간 개발이익금을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필수적이거나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기준과 절차를 특별법으로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국가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지역 1호 공약으로 ‘지상철도 경부선(서울역~당진)·경원선(청량리~도봉산)·경인선(구로~인천역)을 지하화 하겠다’고 하였으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혀 두 번에 걸친 발표를 통해 지상 철도의 지하화를 국민들과 약속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권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통합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공간, 상업 및 공공시설 등을 공급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2. 0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